‘축산악취, 과거와 비슷’

혁신도시 주민 41.4%가 “강도 · 발생빈도 과거와 비슷” · 응답자 97.5% “체감”

“혁신도시 내 축산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와 비슷하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가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시 용지면 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축산악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10명 중 4명(41.4%)은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현재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제 용지면 주민의 경우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5%, ‘조금 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 혁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줄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7.5%가 악취가 체감된다고 응답했고, 이 중 60%가 ‘강함 이상’의 악취를 체감한다고 조사됐다.

악취를 체감하는 계절로는 여름철(47%), 연중(21.1%), 봄(17.2%)을, 시간대는 오후 6~9시(27.2%), 오후 3~6시(21.3%)를, 악취 발생이 많은 날씨는 흐린 날(39.4%)과 비 오는 날(31.5%)을 꼽았다.

또한 악취를 체감하는 방향은 혁신도시 주민의 경우 ‘서쪽(김제 용지면 방향)’이 45%로 가장 높았고, 김제 용지면 주민은 주변에 산재된 인근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뤄 방향 모름(55%)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취 유발시설 단속 강화’(22.2%),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1.6%), ‘축산시설의 이전/폐업/매입 추진’(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철수 위원장은 “그간 전북도에서 혁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축산악취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시 주민 97명, 혁신도시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 포인트 수준이다. /유호상 기자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마을자치혁신본부 전북본부는 ‘마을자치혁신활동가 1만4,000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이 참석해 14개 시 · 군 순회를 알리는 출정식을 17일 가졌다.

“기본권 보장되는 마을 정책 이끌 적임자”

도내 마을자치혁신활동가 1만4000명, 이재명 지지 선언… 14개 시군 순회 홍보 출정식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마을자치혁신본부 전북본부는 ‘마을자치혁신활동가 1만4천명 이재명대선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이 참석해 14개 시 · 군 순회를 알리는 출정식을 17일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근석 전북공동본부장, 김선화 자치전북공동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출정식에는 이재명캠프 자치분권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공동부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 김윤덕 국회의원 등과 마을자치혁신본부 전북본부 이근석 전북공동본부장, 김선화 자치전북공동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본부 마을자치혁신활동가들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사회혁신, 기본권이 보장되는 마을 정책을 함께하는 이재명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 앞으로, 분권 제대로, 나를 위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소방기관 추가 설치를”

두세훈 도의원, 완주지역 예시로 소방력 보강 주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 · 응급발생 대비 필요”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 · 더불어민주당)이 “용진읍은 완주의 수도이자 현재 완주군청 앞 행정복합타운에 약 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다”며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23년~2027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소방력 보강 내용은 소방인력의 충원과 소방장비 배치, 청사 이전 · 신설 계획 등이며 방법은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정령평가 · 의견수렴 ·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의 도내 읍 · 면 소방기관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읍 중 12읍(10읍 안전센터, 2읍 지역대), 144면 중 58면(17면 안전센터, 41면 지역대) 만이 소방기관이 설치돼 있고, 3읍과 86면은 미설치 돼있는 실정이다.

두세훈 의원은 “특히, 용진읍은 군청 소재지이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중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인 관할 면적 15㎢ 이상 지역의 약 2배에 달하는 약 38.5㎢ 임에도, 소방기관이 미설치 돼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두 의원은 “완주군 동상면은 면적 106㎢로 119 지역대 설치 기준인 면적 30㎢ 이상의 3배에 달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며 “소양면에서 동상면으로 연결되는 밤티 터널의 신설로(국지도 55호선)는 차량 및 유동인구가 증가할 예정임에도 119 지역대가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두세훈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농촌지역의 노령인구의 증가로 응급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 시에는 골든타임의 확보만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관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조지훈 전 경진원장, 이재명 선대위 전북 총괄특보단장에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전라북도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17일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탄탄한 조직 구성에 힘을 보태고자 전라북도 총괄특보단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앞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더욱 규합하고 참신한 인물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 이재명 후보의 승리, 4기 민주정부 탄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특보단의 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별 · 직능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특보단의 네트워크를 전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북 총괄특보단장 활동에 이어 그동안 경제 현장에 쌓은 전문성을 발휘해 경제특보 및 정책본부 부본부장 역할에도 집중하며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첫 선거 앞둔 청소년들 “우리들의 이야기가 닿기를”

민주 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정책토론회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듣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가 지난 15일 ‘우리의 이야기가 닿기를, 첫 선거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등을 비롯해 올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만 18~23세)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을 통해 겪은 다양한 문제 등 토대로 정책을 제안했다.

첫 선거권을 갖게 된 김상아 위원(만 18세)은 ▲다자녀의 기준을 첫째에서 막내로 변경 ▲다자녀가정의 소득구간 적용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박세은 위원은 전염병을 주제로 ▲감염자 차별 방지 및 보호, 팬데믹 시기의 경제 부흥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처벌 기준 법제화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이날 청년들이 제시한 모든 안건은 투표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

이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당질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선거를 통해 바라는 점,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대안 등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들은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며 “소중히 형성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투표권 가진분들에게 잘 알려야 왜곡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첫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제시하는 토론회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상수도 요금 ‘금값’ 인하 위한 다양한 대책 세워라”

평균 요금 958원 전국 평균 719원 크게 웃돌아

박용근 도의원, “물 복지 관점서 도비 지원 등 고민을”

전북도가 비싼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은 “전북의 경우 최근 수 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가격(1t 당)은 958원으로, 강원도(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또한 전국 평균 719원보다도 약 1.3배 비싼 상황이다.

이어, 그는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원인은 특정 시.군의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의한 것이다”며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1,045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수 년째 전국에서 손꼽는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스마트검침기 도입 등 기술 여건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 · 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전주 남부시장 방문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 시장 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 16일 새벽 남부시장과 전주 천변 노점상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탐방은 전통시장의 다양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존의 단선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다.

시장 상인들은 현재 여느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천변 노점상인들은 공중화장실 설치와 전주천 포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 전 부지사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통시장과 요식업계를 연결하는 앱을 개발해 도매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어필했다. /김윤상 기자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전북행동’ 20일 출범

온라인 시민 탄소중립 선언 · 정책제안 플랫폼 ‘첫 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북행동’이 오는 2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전북위원회(상임위원장 안호영, 이하 기탄위)’와 시민 · 사회단체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상임위원장 김택천, 이하 전북행동)’이 20일 각각 출범식을 갖고 탄소중립 도민운동을 추진한다. 이에,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체인 ‘탄소중립전북행동’도 사실상 공식 출범하게 된다.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전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안호영 상임위원장(완주, 진안, 무주, 장수 국회의원)과 김성주 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 국주영은 공동위원장, 송승룡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오프라인 진행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이재명의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 온라인 플랫폼을 도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출범을 자축하며 시작된 SNS상 탄소중립 선언에서 안호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전북도를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겠다”며 “우리의 선언이 이재명과 만나 탄소중립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큰 물결을 이루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전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KT 전북법인고객본부 3층 회의실에서 김택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오창환 공동위원장, 김보금 공동위원장, 김은경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나의 다짐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 시민 탄소중립 선언 및 정책제안 플랫폼도 출범식에서 첫선을 보인다.

출범식을 준비중인 공동 사무처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두 출범식 모두 ‘1회용품 없는 행사, 자료집 없는 행사, 현수막 없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해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